

헌법

1. 다음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이 제헌 헌법 이래 사용해 온 “구금”이라는 용어를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의 취지에 따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2. 다음 <보기>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 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은 법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우리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는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고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다시 규정되었다.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③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④ 제헌 헌법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 하였고,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피의자로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4.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 었더라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③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국적법 시행 규칙」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 취득을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5. 다음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하는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 ③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 ④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6. 다음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②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존재한다거나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조약으로는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 ④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입법자는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7. 다음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사업용 토지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③ 농지의 소작제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는 허용되지만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률로서도 허용할 수 없다.
- ④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기업(私企業)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거나 그 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26조 국가의 경영간섭 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8. 다음 <보기> 중 선거제도와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한계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 인구비례 2:1이다.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다음 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조항이 헌법에 처음 규정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②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지역 현안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정당의 출현을 방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 다음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③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과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된다.

④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은 그 성질이 집행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11. 다음 <보기> 중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중 ‘상관’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①	X	O	O	X
②	X	O	X	O
③	O	X	O	X
④	O	X	X	O

12. 다음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에 관한 법규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기초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② 1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새롭게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③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3. 다음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없다.

② 국가자격제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 외국인은 국민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인간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권의 수범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다음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하므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소지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하므로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④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이 드러난 채로 조사받는 보험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범죄정보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5. 다음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달리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내국인 및 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일반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달리 국가인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필요성이 현저히 적으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 하면서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조항은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6. 다음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④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수형자로 하여금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유죄를 근거로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에 한정되므로,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8. 다음 <보기>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의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롭고 충분한 접견을 방해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 중인 외국인은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의해 구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19. 다음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매매 피해자와 구별하여 자발적인 성매매자만 처벌함으로써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 ②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영수증·회계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회계장부 등을 보존하는 행위를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 ④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 다음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②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③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④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1. 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2. 정신과 개원의(開院醫) 甲과 환자 乙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 등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하 ‘보고의무조항’이라 함)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보기> 중 이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진료내역 등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므로 보고의무조항은 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행사 방법에 대한 간섭이므로 보고의무조항은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 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의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고의무조항이 甲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 보고의무조항은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다음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려는 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추징금 미납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4. 다음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통신의 자유는 통신내용의 비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계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 보호한다.
- ④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통신하고자 하는 사람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5. 다음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②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고역(苦役)의 정도를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6. 다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하였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 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7. 다음 학문·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 교원은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에 대해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인 학문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공연물·영상물이 지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직업의 자유와 함께 예술의 자유도 제한한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료인 아닌 사람의 예술의 자유를 제한한다.

28. 다음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③ 알 권리는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정보원(情報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수집·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 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9. 다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한다.

③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④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0. 다음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적어도 내적인 유대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자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 개념에는 법이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31. 다음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좌명의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입자 등의 가족에게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망일시금 지급권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급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 ④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임을 천명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32.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다음 <보기> 중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이용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행위의 금지
- ㉡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이 의료보험 비지정 요양기관 내지 비보험의(非保險醫)로서 진료하는 행위의 금지
- ㉢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의 금지
- ㉣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① ㉠, ㉡ ② ㉠, ㉢ ③ ㉡, ㉣ ④ ㉢, ㉣

33. 다음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있으나,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권이 없다.
- ②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④ 국민투표는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4. 다음 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그 중추적 요소로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5급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32세를 넘는 사람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임권은 재임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는 것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35. 다음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③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36. 다음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국가유공자가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37. 다음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③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④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8. 다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②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③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39. 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육을 받을 권리에선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학교 안팎의 교육영역에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학교 교육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권한이 우위를 차지한다.

③ 의무교육의 실시범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40. 다음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②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피해는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적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헌법 제35조 제1항의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